

기업 CEO들, 사업계획 1순위 ‘AI’… 경제·정책보다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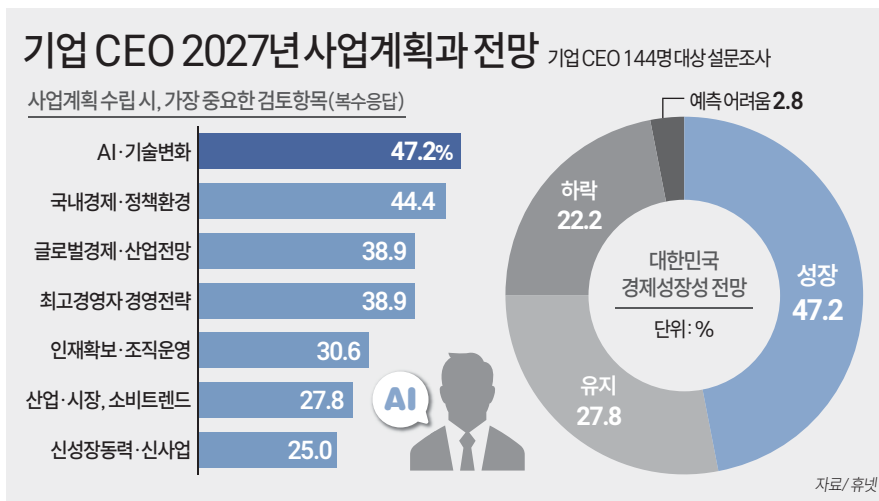
휴넷, CEO 144명 사업계획 설문
47.2% AI·기술 변화 최우선 검토
61.1% 경영 최대 영향 변수 AI 지목
47.2% 내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2027년 사업계획 수립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AI)과 빠르게 발전하는 AI 관련 기술 변화였다.

이런 가운데 CEO 2명 중 1명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결과는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CEO 144명을 대상으로 ‘2027년 사업계획’ 설문조사를 진행해 1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내년 사업계획 수립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항목(복수 응답)은 ‘AI 및 기술 변화’ (47.2%)가 ‘국



내 경제 및 정책 환경’ (44.4%)보다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글로벌 경제 및 산업 전망 (38.9%) ▲최고경영자의 경영 전략 (38.9%) ▲인재 확보 및 조직 운영 (30.6%) ▲산업·시장 및 소비 트렌드 (27.8%) 등의 순이었다.

CEO들은 내년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 (복수 응답)도 AI를 지목했다.

관련 질문에는 ‘AI 기술 발전 및 산업·비즈니스 구조 변화’가 61.1%로 가장 답변이 많았다.

이어선 ▲글로벌 경기 및 금리

(36.1%) ▲국내 정치 및 규제 환경 변화 (33.3%) ▲소비 트렌드 및 내수시장 변화 (27.8%)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세 정책(22.2%) 등이 뒤를 이었다.

AI가 국내의 정치, 경제 등 외부 환경 변화보다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절반이 넘는 기업은 ‘AX(AI Transformation)’를 통해 조직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X 준비 정도’에 대해 ‘일부 사업 부문에서 추진 중’이 38.9%, ‘이미 전사적으로 추진’은 19.4%로 전체 응답자의 58.3%가 일부 또는 전사적으로 AX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AX에 대해 ▲검토중(22.2%) ▲아직 계획 없음(16.7%) ▲필요성 못 느낌(2.8%)도 적지 않았다.

실제 사업계획에 AI를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했다. 2027년 사업계획에 ‘AI

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주요 사업 및 경영 전략에 반영’(41.7%), ‘사업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반영’(22.2%)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는 63.9%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CEO들의 내년 경제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202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성’을 묻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7.2%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는 27.8%였다. 반면 ‘하락’(22.2%) 또는 ‘예측하기 어렵다’(2.8%)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 대한 내년 전망에선 ▲성장(47.2%) ▲유지(16.7%) ▲하락(27.8%) ▲예측하기 어렵다(8.3%)로 각각 나타나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日 국채 매력 커지자 美 장기채 수요 흔들… 韓 금리도 변수

한해지 감안 日 국채 수익률 우위
신규·만기자금 자국채 이동 가능성
美 장기채 수요 약화 땀 금리 상승
국내 장기물 수급 부담까지 겹쳐

일본 국채 금리 상승으로 한해지(위험 회피)를 하는 일본 투자자에게 자국 채권의 상대적 매력력이 커지고 있다. 실제 해외 채권 거래는 기관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앞으로 새 투자금과 만기 상환금의 배분이 미국채 수요를 거쳐 한국 장기금리에 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블랙록투자연구소(BII)는 지난 8일 논평에서 일본 투자자가 10년물 자국 국채로 약 3%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엔화 한해지 비용을 반영한 같은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약 2%라고 비교했다. 해외에서 수익을 찾아온 일본 투자자에게 자국 채권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해지 비용에 달라지는 채권 선택
한해지는 달러 자산을 엔화로 바꿀 때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거라다. 달러로 계산한 미국채 수익률이 높더라도 해지 비용을 반영하면 엔화 기준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 블랙록의 미국채 비교치는 3개월 선물환 계약을 반복 갱신할 때의 추정치로, 해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10년간 확정된 수익률을 뜻하지 않는다.

자금 배분의 변화는 신규 투자와 만기

자금 재투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기존 해외채권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새 투자금과 상환받은 자금을 일본 국채에 더 배분하면 해외채권의 추가 매수 수요는 약해질 수 있다. 블랙록도 일본 내 수익률 상승이 해외채권에 대한 신규 수요를 줄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단기금리 차가 좁

히지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달러 자산의 엔화 해지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한해지 후 미국채 수익률은 개선될 수 있어,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만으로 해외 채권 투자의 방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 한국 장기금리에도 변수

일본 재무성이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해 지난 8일 발표한 8월 통계를 보면 은행·신탁은행의 자체 운용 부문인 은행계정은 해외 중장기채 처분액이 취득액보다 1조 6793억엔 많았다. 반면 고객의 수탁자산을 운용하는 신탁은행 신탁계정은 2조 3329억엔 취득 초과였다. 다른 부문까지 포함한 전체는 1430억엔 처분 초과를 기록했다.

재무성이 10일 발표한 주요 금융기관의 주간 증권투자 통계에서는 지난 8월 30일~9월 5일 해외 중장기채 취득액이 처분액보다 1119억엔 많았다. 직전 두 주의 처분 초과에서 3주 만에 취득 초과로 전환했다.

앞으로 일본 투자자의 미국채 추가 매수가 줄어든다면 다른 투자자가 이를 열

마나 매우는지가 중요해진다. 기존 수익률로 충분한 매수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는 압력이 생길 수 있다.

한국 채권시장에는 국내 장기물 수급 부담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7일 보고서에서 최근 국고채 장기금리가 초장기물 공급 확대와 보험사 매수 기반 약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채 금리는 은행채와 회사채의 기준이어서 대외 금리 상승이 국내 채권금리로 번지면 민간의 자금 조달비용에도 부담이 된다. 파급 정도는 국내 채권 공급과 수요, 통화정책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채 수요 구조의 변화로 장기채 보유 위험에 대한 보상인 기간프리미엄이 추가로 상승할 경우 “국내 요인으로 이미 높아진 국고채 금리에 대외 요인까지 가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김민석 “메가특구법 등 최대한 협의”… 한노총 “정년 65세 연장” 요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 대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찾아 노동계 주요 입법과제·현안 의견 청취
주52시간 예외·파견 확대 등에 반발
공공기관 통폐합 실질 노정교섭 요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메가특구특별법,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을 노동계와 최대한 협력해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에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을 찾아 ‘메가특구특별법도, 공공기관 이전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어서 고민을 하겠지만 법안을 만들고 성안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을 찾아 모두 발언 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파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되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파견근로자 업무 확대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메가특구법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 권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산업 인프라 등 7개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고한 메가특구법 내용에 따르면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제션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특구내 기업에 파견 근로자

를 보낼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파견 허용 업종은 32개로 제한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 등은 파견이 금지돼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메가특구 내 반도체 기업 종사자가 16주 연속으로 주80시간 일하고 나머지 10주를 단축근무로 26주 평균 주52시간을 맞출 수 있어 총근로시간 한도를 맞출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김 대표의 방문에 맞춰 ▲법정 정년 65세 연장 ▲메가특구법 노동권 배제 시도 철회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편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 폐기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실질적 노정교섭 보장 등을 담은 한국노총 입법과

제를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메가특구(특별법)이든, 공공기관 통합과 지방이전 이든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정부·여당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저희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후퇴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정년연장안을 마련하고 성안을 위해 노사 중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 정년 연장특위는 지난 6월 중재안 초안에서 2029년 법정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37년에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정년퇴직 뒤 재고용하는 제도도 도입해 재고용 의무연령을 2028년 61세, 2029년 62세, 2031년 63세, 2033년 64세, 2035년 65세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